

# KMI 동향분석

**VOL.157**

2019 NOVEMBER

발간년월 2019년 11월(통권 제157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감 수 김우호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기획조정본부 연구관리실 홈페이지 www.km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 해양교육·문화 진흥법 만든다.

최재선 종합정책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

(jschoi@kmi.re.kr/051-797-4951)

이슬기 종합정책연구본부 연구원

(sglee84@kmi.re.kr/051-797-4768)

최일선 종합정책연구본부 전문연구원

(ilsunchoi@kmi.re.kr/051-797-4727)

해양교육과 해양문화에 관한 법률안 2건이 국회에 정식 발의되어 심의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양문화와 해양교육에 관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회와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해양교육이 활성화되고, 해양문화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표 발의 오영훈 의원)과 해양문화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표 발의 윤준호 의원)이 각각 입법 발의된데 이어 해양수산부는 올 연말까지 해양문화와 해양교육 발전 중장기 로드맵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1) 5년 주기의 실태조사를 거쳐 해양교육·해양문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2) 중앙과 지방에 각각 해양교육센터와 해양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업무를 심의하는 기관으로 중앙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심의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경우 해양문화에 초점을 맞춘 법안으로, 1) 해양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골격으로 하면서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해양문화 시범도시로 지정하여 육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양문화 진흥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법정단체로 가칭 ‘해양문화진흥원’을 설치하는 규정을 둔 것이 특징이다.

해양수산부가 수립하고 있는 로드맵은 해양문화와 해양교육 혁신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 개선, 콘텐츠 개발 및 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4가지의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로드맵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정부에서 추진할 정책적인 과제와 세부 시행방안, 그리고 민간 지원사항 등을 담고 있다.

---

국회와 정부에서 이같이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활성화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1996년 해양수산부 출범 이후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쳤음에도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법적·제도적 기반이 취약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그 동안 업계에서는 해양교육의 확대와 해양문화의 산업화와 이와 관련한 콘텐츠 개발과 보급을 요구해왔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해양 선진국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해양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거나 관련 기관에서 해양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다. 중국과 타이완 등은 해양교육을 공교육화하였고, 미국은 최근 해양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은 지난해 제3차 해양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학교에서의 해양교육 실시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외국의 경우 해양문화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거나, 해양박물관 등 해양문화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국민의 해양문화 이용 기회를 강화하는 한편, 관광객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활용하는 등 비즈니스 산업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올해 5월 텐진에 국립해양박물관을 개관하여 해양굴기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한편, 9월 24일 국회에서 해양수산부와 국회해양문화포럼(대표 의원 김영춘 前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전문가들은 이 법률이 신속하게 제정되어야 한데 의견을 같이 하고, 법정기관으로 해양교육문화재단을 설립해 정부 해양정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해양수산부와 국회에서 해양교육과 해양문화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려 있던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을 계기로 정부와 민간단체, 전문가들이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정책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입법화

### ■ 해양문화시설의 대규모 확충 및 해양교육·해양문화 입법 작업 등 가속화

- 현 정부 출범 이후 해양문화시설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법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음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230억 원을 들여 경상북도 포항에 있는 국립 등대 박물관을 크게 증축하면서 2023년 개관을 목표로 국립 인천 해양박물관 건립도 서두르고 있음
- 또한 내년 5월에는 경상북도 울진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국립 해양과학교육관이 정식으로 문을 여는데 이어 청주에도 비슷한 성격의 해양문화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난해 전남도가 해양박물관 설립 타당성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마쳤으며, 포항시는 올해 들어 가칭 환동해문명사 박물관 건설 용역사업에 착수했음

표 1. 최근의 해양박물관 등 건립 추진 현황(2019년 10월 현재)

지 역	명 칭	비 고
부산	국립 해양박물관	2012년 10월 개관
인천	국립 인천해양박물관	2025년 개관 목표
포항	국립 등대박물관	2020년 증축 개관
울진	국립 해양과학교육관	2020년 5월 개관
청주	국립 해양과학교육관	사업 타당성 승인
전남	해양박물관(지자체 차원)	2018년 용역 완료
포항	환동해 문명사 박물관(지자체 차원)	2019년 용역 착수

자료 :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리

### ■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

- 올해 들어 국회에서는 모두 2건의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된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해양문화·해양교육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음
- 더불어 민주당 윤준호 의원(부산 해운대 을) 등 국회의원 11명이 지난 2월 27일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윤준호 의원안)을 제출한데 이어
- 더불어 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 제주시 을) 등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4월 9일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오영훈 위원안)을 발의했음

- 한편,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일정을 정하고, 가칭 해양문화·해양교육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음
- 이 같이 국회와 정부에서 해양 소프트 파워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1996년 해양수산부 출범 이후 다양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정책의 추진으로 해양에 대한 국민 인식이 크게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대부분의 정책이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보다는 단편적이고,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
- 특히 그동안 관련 업계에서 해양교육과 해양문화를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없는 상태였음
- 이에 따라 발의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인프라가 크게 개선되고, 이 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촉진될 것이 분명함

## 해양교육·해양문화 시행 현황

### ■ 해양 소양 증진 등 학교 해양교육사회 해양교육 실시와 제도적 기반 조성

- (학교 교육)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해양교육은 들어 있지 않으나 해양수산부와 교육부는 해양교육 시범학교를 지정하고, 2002년부터 '18년까지 전국 총 273개 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해양관련 교육용 부교재를 보급하고 있음
  - 해양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시스템 미비, 담당 교사의 인센티브 부재, 지정학교수가 적고 지정기간이 짧아 성과 확산에 한계가 있음
    - ※ 전국 초·중·고등학교 11,636개 중(2019.10. 현재) 273개교 인 2.3% 수준에 불과함
- (사회교육) 해양수산부 및 관련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청소년,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해양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임
  - 단편적인 일회성 교육, 해양레포츠 중심의 흥미 위주의 교육으로 학교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국민의 해양적 소양 증진을 위한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에는 한계가 있음
- (교육기반) 해양수산부는 해양교육 확대를 위해 「해양교육 활성화 방안」(‘14.2) 및 「해양교육 종합 로드맵」(‘17. 3)을 수립하였으며 최근 해양문화·교육 중장기 로드맵(‘19. 12월 예정)을 추진 중에 있음

- 해양교육을 실시할 법적 근거 미흡, 전담부서 및 전문기관의 부재 등으로 해양교육의 중요성에 비해 관련 정책 추진은 상대적으로 미성숙 단계임

## ■ 해양교육 수요 및 기존 제도 정비에 요구가 크나 추진 체계는 미흡한 실정

- 해양수산부의 해양교육 예산은 ‘해양정책 및 문화육성’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2017년 14억에서 2019년 11억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임
- 또한 기재부의 ‘경제교육 지원’ 사업 예산이 2019년 37억인 것에 비하면 1/3에도 못 미치는 실정임

**표 2. 해양교육과 경제교육 연차별 투자 예산 비교**

단위: 백만원

세부 사업명	2017	2018	2019	주관부서
해양교육 사업*	1,475	1,475	1,110	해양수산부
경제교육 지원	3,560	3,704	3,779	기획재정부

\* 해양정책 및 문화육성(2031-300) 사업 중 해양교육 사업 예산만 기입

자료: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월별 집행실적에서 검색(<http://www.openfiscaldata.go.kr>, 2019.10. 6. 검색)

- 정규교육 과정 내 해양관련 반영 수준이 낮고 비정기적으로 선택적 교육 실시, 교사의 전문성 결여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해양교육 실시는 미흡한 상황임

※ 한국해양교육연구회(2016)의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과서 내 해양관련 내용은 6.7%에 불과하며, 중학교 2009년 교육과정에 있었던 ‘해양산업’은 2015년 개정 시 삭제되었음. 점차 ‘해양안전’과 ‘레저’ 분야를 강화하는 추세임

- 해양수산 직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다소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해양 인재 양성 및 직업 홍보를 위한 체계적인 해양교육 강화 필요성이 커지는 실정임

※ KMI가 실시한 ‘2019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2019.4.)에 따르면 가족의 해양수산 관련 취학 및 취업에 국민의 50% 이상이 지지함

## ■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과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에서 해양문화 사업을 시행

- 우리나라 해양문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2004년으로 비교적 최근으로 제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연동계획)에 뿌리를 두고 있음
  - 이 계획에서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법·제도 마련 등의 정책을 제시하였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음

-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문화와 관련한 대표적인 정책은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과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6조에 의거한 10년 단위 국가계획으로 현재 제2차 계획이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음
  - 해양문화와 관련한 추진전략으로는 ‘미래형 고품격 해양문화 관광의 육성’ 아래 ‘해양문화 콘텐츠의 다양화’라는 중점과제를 포함하고 있음
  - 실천과제를 보면 해양역사·문화자원의 발굴 및 해양의식 확산으로 홍보를 강조하고 있으며, 해양문화 인프라 보급 및 확산으로는 인프라 구축, 축제 육성, 해양교육 강화 등을 반영함

**표 3.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과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내 해양문화 관련 정책**

구분	전략과제	세부 추진과제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해양문화 콘텐츠의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역사·문화자원의 발굴 및 해양의식의 확산</li> <li>- 해양문화 인프라의 보급 및 확산</li> </ul>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문화와 예술이 있는 아름다운 바다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문화자원 발굴 및 산업화</li> <li>- 해양문화시설 확충</li> <li>- 해양문화도시 브랜드 개발</li> </ul>

자료 : 해양수산부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과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리

-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에 의거하여 해양관광의 진흥을 목적으로 시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제2차 계획이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음
  - 해양문화와 관련한 전략과제로 ‘문화와 예술이 있는 아름다운 바다관광’을 설정하고 해양문화자원 발굴 및 산업화, 해양문화시설 확충, 해양문화도시 브랜드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세부과제 내용을 보면 해양문화 자원의 발굴을 통한 상품 개발 및 콘텐츠 산업 육성, 국립해양박물관 운영의 고도화, 지역별 차별화된 해양문화시설 조성, 해양문화도시 브랜드 개발, 해양문화관광 축제 육성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문제는 해양문화사업이 문화시설 구축, 문화콘텐츠 확대, 홍보 및 인식제고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문화 지원사업 등의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것임
- 다만, 문화시설 확충 등 인프라 구축사업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등대박물관 등의 추진 및 확장을 통하여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나,
  - 해양문화 축제, 해양문화 브랜드, 해양문화 산업화, 국민의 해양의식 함양 등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의 해양교육·문화 시행 현황

### ■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 국가주도의 체계적인 해양교육을 강화하는 추세

- (미국) 2002년부터 ‘해양적 소양을 갖춘 시민 육성’을 해양교육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캠페인을 시작함. 해양대기청(NOAA) 산하 해양과학교육센터가 중심이 되어 해양관련 원칙과 개념을 정립함
- (일본) 2007년 해양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해양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하도록 규정함. 제3차 해양기본계획(2018-2022)은 해양교육을 의무화하고, 3가지 해양교육 기본방침을 제시함
  - 1) 해양강국 유지를 위한 전문 인재 육성, 2) 어린이와 청년에 대한 해양교육 추진, 3) 해양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
- (중국) 2008년 2월에 제정된 「국가해양사업발전계획요강」에서 해양인재육성 및 교육강화에 대해 규정함. ‘국가 해양국홍보교육센터’를 설립하여 국가 주도로 해양교육을 실시함
- (대만) 2008년 초중고 7개 주요 교과영역에 해양교육을 포함함. ‘지역해양교육자원센터’를 전국에 설치(22개), 국가해양교육센터(대만해양대학 내 위치)가 해양교육 플랫폼 역할을 수행함
- 위의 국가들은 해양교육을 국가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인식하고, 국가해양교육센터를 설립하여 해양교육 플랫폼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또한 국가주도로 교육과정 내 해양교육을 규정하고, 통일화된 교재 개발 보급, 교원의 전문성 강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 인도네시아, 해양문화를 국가 해양정책의 7대 핵심전략의 하나로 적극 추진

- 인도네시아는 2017년 3월 대통령령 16호로 ‘인도네시아 해양정책’을 수립하면서 해양문화를 7대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설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음
  - 7대 해양정책은 ①해양 및 인적 자원 개발, ②해상 보안과 안전 및 법 집행, ③해양 거버넌스와 제도, ④해양 경제 발전, ⑤해양공간 관리 및 보호, ⑥해양문화, ⑦해양 외교로 구성됨
- 해양문화와 분야에서는 6개의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적인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해양문화 정책 6개 목표: ①시민의 해양문화 소양 개선, ②지속가능한 어업자원관리를 위한 지역 고유의 전통지식 활용, ③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항만 어항의 활성화로 관광 자원 개발, ④지역 주민들의 해양문화 이해증진 프로그램 도입, ⑤해양문화 혁신을 위해 지역 고유의 지식 개발 및 활용, ⑥해양문화 가치와 사회 시스템의 목록화 및 체계적인 활용 방안 모색
- 이에 따라 12개 도시에 해양교육 커리큘럼을 도입하고, 해양지식과 해양문화의 연계방안을 구축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해양문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봐야 함

## ■ 중국, 5월 세계 최대 국립해양박물관 개관 계기로 해양문화 콘텐츠 산업화

- 중국의 해양문화산업 발전은 2014년 8월 중국문화부와 재정부가 제시한 특색 있는 문화산업의 촉진 전략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해양문화와 관련된 산업을 중요한 문화산업 중 하나로 인식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을 국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임
  - 중국 해양문화산업: ①해양신문 출판·발행 서비스, ②해양방송 TV·영화 서비스, ③해양문예창작·연출 서비스, ④해양문화 정보전송 서비스, ⑤해양문화 크리에이티브·설계 서비스, ⑥해양문화 레저오락 서비스, ⑦해양 공예 미술품의 생산, ⑧해양 전시 서비스, ⑨해양 대형 이벤트 기획·준비 서비스 등 9개로 분류했음
- 해양문화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양생문화와 연계 양생산업<sup>1)</sup>, 비즈니스 문화와 연계 비즈니스 관광업, 전시 문화와 연계 축제·전시 산업 등 해양문화와 관련한 새로운 업태도 등장함
- 중국은 올해 5월 국립으로는 처음으로 텐진에 해양박물관을 개관하였는데,<sup>2)</sup> 이를 계기로 해양문화 전승과 보존, 해양산업의 발전, 국민의 친수문화 제고, 국가 단위의 해양문화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해양문화 산업화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임

그림 1. 중국 텐진에 위치한 국립해양박물관 전경



자료 : <https://www.hymuseum.org.cn>(검색일: 2019. 10. 2.)

1) 양생은 보양과 유사한 의미로, 특정한 물질을 신체의 건강 증진과 힐링 등에 활용하는 모든 활동을 통칭하는 의미임. 즉, 머드팩 등을 이용하여 피부 미용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음

2) 이 박물관은 2007년에 처음으로 설립이 논의된 이후 2014년 10월 텐진 빈하이 신구 해양문화공원 내에서 공사가 시작되었음. 2018년 12월 준공되어 올해 5월부터 임시 개관에 들어갔음. 이곳이 박물관 부지로 선정된 것은 베이징과 가깝다는 지리적인 이점과 빈하이 신구 개발 우대정책, 풍부한 해양인문 문화유산, 막강한 해양경제 규모 등이 고려되었기 때문임. 개발 주체는 중국 자원자연부와 텐진시 정부이며, 해양자연과 인문 역사 전시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중국은 이곳을 전시 교육, 과학연구, 해양문명사 교류와 전파, 해양 레저 관광 등과 연계된 해양과학기술 교류 플랫폼으로 집중 개발한다는 계획임



## 오영훈 의원 법안 주요 내용

### ■ 학교 및 사회에서의 해양교육 활성화와 해양문화 산업 발전이 주요 내용

- 오영훈 의원안은 총칙·해양교육·해양문화 등 본칙 5개장과 28개 조문,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학교와 사회에서 체계적인 해양교육을 실시하고, 해양문화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정보 제공을 통해 해양문화상품의 기획, 개발, 제작, 생산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임
- 이 같은 입법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법안에서는 해양교육과 해양문화에 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자원과 균등한 해양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가 있음(안 제4조)
  - 2) 그리고 국가 등의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에 대한 재정상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안 제4조·제13조·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한편,
  - 3)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를 두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 및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해양문화 자료 수집과 해양교육 시설 및 단체의 활동현황 등에 대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4) 해양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해양교육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근거와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해양교육 지원을 협의하기 위해 지역해양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5) 분야별 사회해양교육을 실시하고 해양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근거를 두고,
    -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도록 하며, 인증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6) 그리고 해양문화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21조와 제22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양문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수집·보존하고,
    - 이를 번역·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함께, 해양문화 연구의 다양화 및 심층화, 융복합화 등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음<sup>3)</sup>

**표 4.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b>제1장 총칙</b>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해양교육문화심의회 설치·운영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b>제2장 해양교육</b>	제8조(해양교육센터의 지정) 제9조(지역해양교육센터의 지정) 제10조(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 지정의 취소 등) 제11조(지역해양교육협의회) 제12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제13조(해양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제14조(인증의 변경 및 취소) 제15조(해양교육 전문강사의 교육기회 제공 등) 제16조(시정·운영정지 명령 등) 제17조(학교해양교육의 지원) 제18조(사회해양교육의 지원) 제19조(경비지원 및 보조) 제20조(해양교육시설 등의 평가)
<b>제3장 해양문화</b>	제21조(해양문화의 확산) 제22조(연구 활동 지원 등)	
<b>제4장 보칙</b>	제23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제24조(청문)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b>제5장 벌칙</b>	제26조(벌칙) 제27조(양벌규정) 제28조(과태료)	
<b>부칙</b>	제1조(시행일)	

자료 : 오영훈 의원안 검토의견서

3) 국회, 오영훈 의원법 검토의견서, 2019년 7월 9일

## 윤준호 의원 법안 주요 내용

### ■ 해양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 가칭 해양문화진흥원 설립 등에 관한 내용 포함

- 윤준호 의원법은 해양문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법률안으로, 본칙 20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sup>4)</sup>
- 법률안을 제안하면서 윤준호 의원은, 우리나라는 다양한 해양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기존의 문화 관련 법률들은 대부분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해양문화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음
- 이 법률안은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1)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문화의 보존·진흥을 위하여 해양문화보존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하고(안 제5조),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대학이나 관련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8조)
  - 3) 또,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해양문화 활성화 등 해양문화보존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5년마다 조사할 것을 의무화(안 제9조)
  - 4) 이와 함께, 해양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문화도시 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0조)
  - 5)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문화예술·해양문화산업·해양관광 등의 분야별로 해양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1조)
  - 6)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문화 보존과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해양문화 보존과 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문화진흥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음(안 제16조)
  - 7) 그리고 해양문화 진흥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기업, 연구원 등에 일정한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두고 있음(안 제18조)
-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이런 기능은 가칭, 해양문화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4) 이하 내용은 국회, 윤준호 의원안 검토 의견서 인용 및 일부 수정

표 5.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b>본칙</b>	<div>제1조(목적)</div> <div>제2조(정의)</div> <div>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div> <div>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div> <div>제5조(해양문화보존 및 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div> <div>제6조(해양생활문화 지원)</div> <div>제7조(해양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div> <div>제8조(해양문화전문인력의 양성)</div> <div>제9조(해양문화실태조사)</div> <div>제10조(해양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div> <div>제11조(해양문화도시의 지정)</div> <div>제12조(해양문화도시의 지정 취소)</div> <div>제13조(해양문화도시에 대한 지원)</div> <div>제14조(해양문화의 보존 및 확산)</div> <div>제15조(국내외 교류협력)</div> <div>제16조(해양문화진흥원의 설립 등)</div> <div>제17조(해양문화진흥원에 대한 지원)</div> <div>제18조(연구 활동 지원 등)</div> <div>제1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div> <div>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div>
<b>부칙</b>	제1조(시행일)

자료 : 윤준호 의원안 검토 의견서

## 해양수산부 로드맵의 주요 내용

### ■ 해양문화 확산과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중장기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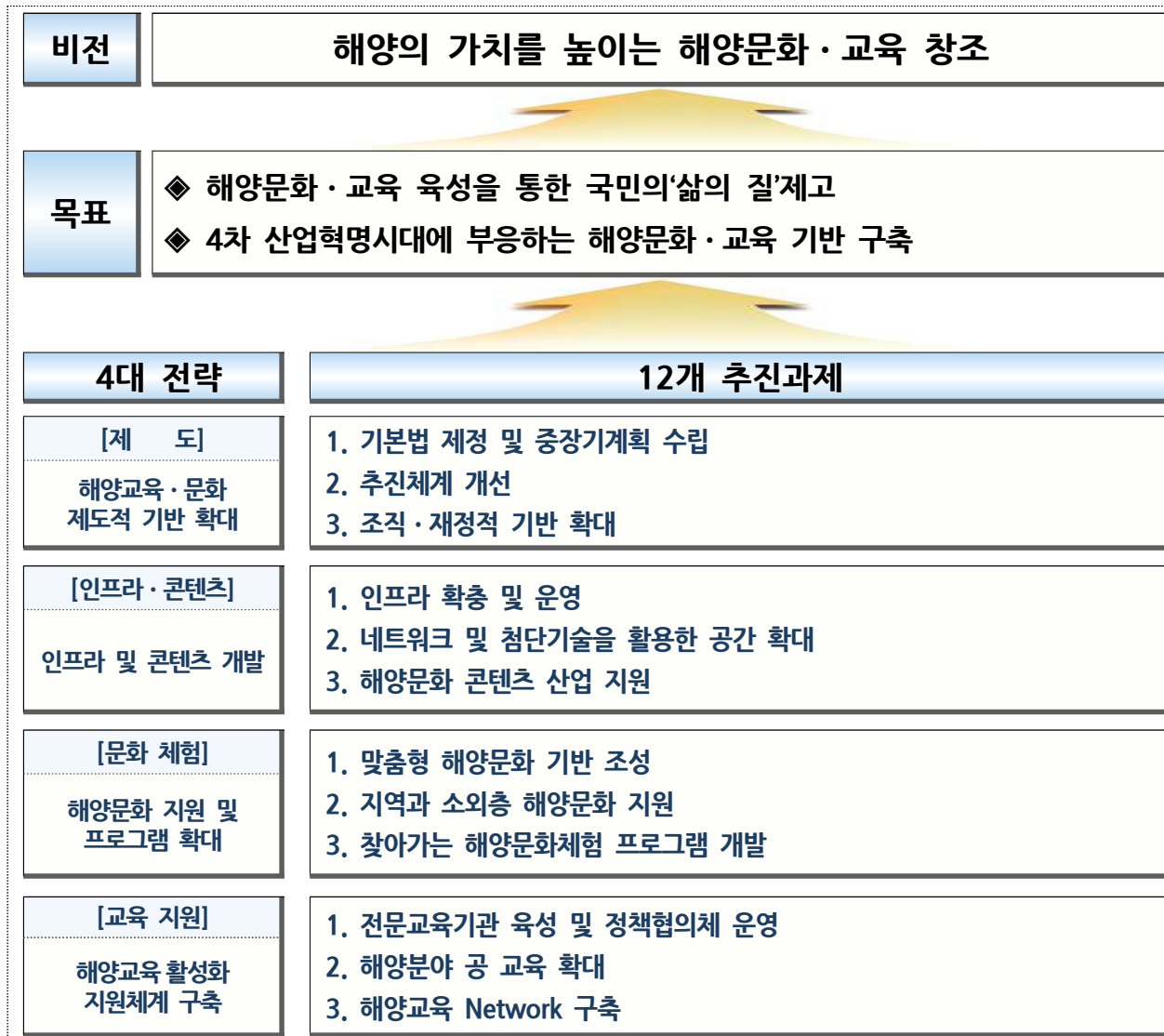
- 해양수산부는 올해 말에 발표한다는 일정을 정하고, 가칭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중장기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음
- 로드맵 수립에 나선 것은, 그동안 해양문화 확산과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 확대, 프로그램 개발 등이 적극 추진되었으나, 제도적·재정적 기반 부족으로 성과를 내는데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이를 염두에 두고 해양수산부는 로드맵에 해양문화와 해양교육에 대한 4가지 추진 전략을 마련함
  - 4대 추진전략은 제도와 인프라·콘텐츠, 문화체험, 그리고 교육 지원 등으로 구분되어 각각 3개의 추진과제가 들어 있음

### ■ 해양문화교육 팀 신설, 해양문화 콘텐츠산업 집중육성 등 경제와 일자리 창출

- 이 같은 로드맵 가운데 관심을 끄는 것은 해양수산부가 해양문화·교육 관련 정책 수립 및 개발 기능의 확대를 위해 「해양문화·교육팀」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도 크게 늘리기로 한 점임
- 또한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조직으로 가칭 「해양문화·교육 심의위원회」를 두거나 기존의 한국해양재단을 한국해양문화교육재단으로, 그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음

- 특히 로드맵에 들어 있는 내용 가운데, 비즈니스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문은 앞으로 해양수산부가 해양문화 콘텐츠 산업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임
- 이를 위해 「해양문화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2021년까지 수립하고, 해양문화정보 플랫폼 구축 및 융합산업 개발(R&D)을 지원하기로 했음

그림 2. 해양문화·해양교육 중장기 로드맵



자료 : 국회해양문화포럼 정책 세미나, '해양교육·문화 활성화법' 제정과 필요성 공청회 발표자료, 해양수산부, 2019.9.24.

## 공청회 의견과 향후 추진일정

### ■ 9월 24일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 개최, 신속한 입법절차 마무리 잇달아 촉구

- 한편, 국회에 상정된 오영훈 의원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가 지난 9월 2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음
- 이날 행사는 국회해양문화포럼(대표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수산부가 공동개최했는데,
- 문성혁 장관은 축사에서 ‘해양수산부는 바다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고, 바다를 국민이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고 전제하고, ‘오늘 논의되는 법률 제정과 로드맵 토론이 우리나라가 해양문화부국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음
- 김영춘 포럼 대표의원은 ‘바다를 토대로 하는 산업은 해운과 수산뿐만 아니라, 레저 관광, 스포츠 등 활용할 자원이 상당하다’고 밝히면서 국회해양문화포럼이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이 해양소프트 파워를 갖출 그날까지 법률 제정 등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음
- 입법공청회에서는 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법안의 주요내용과 2) 해양문화·해양교육 중장기 로드맵이 발표되어 관심을 모았음
- 특히 해양문화 로드맵의 경우, 해양수산부에서 입법 절차와 관계없이 2020년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주강현 국립해양박물관장의 진행으로 이뤄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이 법률의 제정은 그동안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진행되던 해양교육을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 상정된 두 가지 법률의 통합 심의 및 추가되는 조문에 대한 부처협의 진행

- 현재 국회에는 해양교육과 해양문화에 관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2개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어 추후 심의과정에서 통합·심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 해양수산부는 두 법안에 대한 조문 분석 작업을 끝내고 필요한 경우 통합안에 대한 의견을 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두 법안이 통합되는 경우, 해양교육과 해양문화에 관한 사항을 모두 담고 있는 오영훈 의원안을 중심으로 윤준호 의원안에 들어 있는, 해양문화도시 지정과 해양문화진흥원 규정 등을 반영하면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임



## ■ ‘한국해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항 넣은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

- 현재 오영훈 의원안에 가칭 ‘한국해양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당초 정부는 오영훈 의원안에 이 같은 규정을 넣은 방안을 내부적으로 고려하였으나 입법 추진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재 법안에는 이 조항이 들어 있지 않은 상태임
- 업계와 법률 전문가들은 법률 제정을 추진하면서 별도의 법정 기관으로 협회 등을 포함하는 경우, 조직 신설에 따른 예산 부담 등으로 관련 부처 협조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해양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앞으로 법률 시행에 필요한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는 한국해양재단을 승계하는 형태가 될 것이므로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는 분석<sup>5)</sup>
- 즉, 기존의 한국해양재단을 오영훈 의원안에 반영하여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법정 기관화하는 것이므로 입법 추진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임

## ■ ‘해양 소프트 파워’가 강한 나라를 만드는 후속 조치 등의 시행이 관건

-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해양교육과 해양문화에 관한 두 가지 법률안은 늦어도 이번 20대 국회에서 최종 처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20대 국회에서 심의·처리되지 못할 경우, 국회 임기 만료로 기존에 제출된 법안들은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내년 4월 총선 이후 다시 상정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해 말까지 해양문화·해양교육 발전 중장기 로드맵을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내년부터 이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사업 시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 이 같은 정부 방침과는 별도로 민간 부문에서도 해양교육을 활성화하고, 해양문화 사업을 새로운 비즈니스로 만드는 아이টে를 개발하고, 정책화하는 작업이 시급한 실정임

5) 윤준호 의원안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박선춘 전문위원은 새로운 기구 신설보다는 현재 해양문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재) 한국해양재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음

## KMI 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간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 TEU 이상 줄어든 듯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업·수산물,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지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9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6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제14호	빅 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2017.02.08
제15호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2017.02.15
제16호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2017.02.22
제17호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	2017.02.23
제18호	‘전국 해양수산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17.03.02
제19호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벙커링 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2017.03.15
제20호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2017.03.24
제21호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2017.03.31
제22호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2017.04.07
제23호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 함께 가야: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2017.04.14
제24호	러시아 명태 비즈니스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2017.04.19
제25호	어린 물고기를 살릴 지혜로운 소비로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해야	2017.04.21
제26호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컨테이너 화주의 비용 20% 절감 가능	2017.04.28
제27호	국내 크루즈시장 체질개선 시급	2017.05.04
제28호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2017.05.18
제29호	中 일대일로, 글로벌 SCM 구축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2017.05.25
제30호	새 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방안	2017.06.01
제31호	4차산업혁명의 침범!,로봇·스마트 항만이 현실로... - 한국, 완전무인자동화 항만 세계 흐름을 따라가야 -	2017.06.07
제32호	60돌 맞은 원양산업, 원양어업 재건을 위한 특단 대책 필요	2017.06.14
제33호	‘여객 안전’과 ‘일자리 창출’ 위해 연안여객 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	2017.06.21
제34호	소매 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교체시급, 국민들은 가격표시제 요구	2017.06.28

구분	제목	발간일
제35호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위해 AMP 설치 서둘러야	2017.07.05
제36호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 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	2017.07.12
제37호	해운-조선, 상생(相生) 통해 불황극복과 재도약 모색해야	2017.07.19
제38호	국내 해수욕장 관리,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필요	2017.07.26
제39호	최근 해양 국제기구의 거버넌스 변화와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2017.07.26
제40호	재조해양(再造海洋)으로 해양의 '판'을 키워야 :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 전략 세미나' 지상중계	2017.08.02
제41호	신재생에너지, 해양에서 답을 찾자	2017.08.09
제42호	수산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	2017.08.16
제43호	신정부, 선박교통관제(VTS) 관리체계 개선 필요	2017.08.23
제44호	바다의 불청객 갯벌이모자반, 다각적인 대응 방안 수립 시급	2017.08.31
제45호	한진해운 사태의 반성과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 방안	2017.09.12
제46호	한·러 정상회담, 북방경제 협력 기회 - '9 브릿지'를 해양수산세부 전략으로 구체화할 필요 -	2017.09.13
제47호	갯벌복원 사업 확대에 대비한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2017.09.20
제48호	일본 항만 발견 붉은 불개미 확산 우려, 방역체계 마련 시급	2017.09.20
제49호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료의 현실화 필요	2017.09.29
제50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강원세미나' 지상중계	2017.09.29
제51호	'국민 횡감' 자리매김한 수입 연어, 안정적인 먹거리 차원 관리 필요	2017.10.12
제52호	부산항 터미널 생산성 향상대책 수립 필요	2017.10.23
제53호	대형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우선되어야 - 물적, 인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사고 원인분석과 사전 투자 확대 필요 -	2017.10.27
제54호	미국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국내 대책 필요	2017.10.27
제55호	국내 해양치유관광 육성 계기 마련	2017.11.01
제56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1.10
제57호	수산업직불제 제도 개선 방향 - 마을공동기금 활성화 등으로 어업인 만족도 높이는 내실화 필요 -	2017.11.15
제58호	새 헌법에 해양수산의 가치 반영되어야	2017.11.22
제59호	1만 톤급 이상 대형 제2쇄빙연구선 건조 시급	2017.11.24
제60호	제19차 당 회의를 통해 본 시진핑 2기 중국 해양수산 정책 방향	2017.11.29
제61호	바다의 반도체 김, 수출 1조원 달성 전략	2017.12.06
제62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전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2.13
제63호	골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작은 SOC 사업을 강화해야	2017.12.20
제64호	부산항, 2,000만 TEU 달성 의미와 향후 과제	2017.12.27
제65호	'핵심 키워드'로 본 2017년 글로벌 해양수산	2018.01.03
제66호	빅데이터로 본 2017 해양수산	2018.01.10

구분	제목	발간일
제67호	해양수산물과 국민경제 - '2018 해양수산물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	2018.01.17
제68호	'2017년 KMI 물류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물류 R&D 추진되어야 - 범부처 R&D 추진필요 -	2018.01.24
제69호	바다낚시 정책, 안전·환경·자원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2018.01.31.
제70호	해상 안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안해상교통의 대중교통화 추진 필요	2018.02.07.
제71호	일본 '영토·주권전시관' 개관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 중요 사료의 영문화 작업을 통하여 세계 주요 전문가 대상 홍보 강화해야 -	2018.02.07.
제72호	자율운항선박, 침체된 해운산업 및 조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2018.02.14.
제73호	중국 '북극정책백서' 공식화로 북극 투자 증가할 듯	2018.02.21.
제74호	스마트항만(Smart Port), 전체 물류망을 고려한 로드맵 수립 필요	2018.02.28.
제75호	대형 재난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 활용방안 강구 필요	2018.03.09.
제76호	연안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중심 대응방안 마련 시급	2018.03.14.
제77호	바다이용의 대전환, 해양공간계획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2018.03.21.
제78호	전국 해양수산물 현안과 정책 공유로 지역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본격적 돌입	2018.03.30.
제79호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의의와 과제 - 해운 정책 지속적 추진 필요 -	2018.04.13.
제80호	국민 92.2%, 미래 국가발전에 해양이 중요하다고 인식: '2018 해양수산물 국민인식조사' 결과	2018.04.20.
제81호	2017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크게 개선	2018.04.30.
제82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위한 대응책 마련 절실... 2028년 종 료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수립 시급	2018.05.10.
제83호	연안여객 안전 지원을 위해 해상여객안전공단(가칭) 설립 필요	2018.05.16.
제84호	전북 수요 증대를 위해 산지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수익개선 위한 폐사율 저감 혁신 세워야	2018.05.24.
제85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정책 확대해야	2018.05.31.
제86호	6.13 지방선거 이후, 지역 해양수산물 정책대응 필요	2018.06.11.
제87호	섬 정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섬 전담 연구기관 설립 필요	2018.06.14.
제88호	수산물양식, 국제양식규범에 맞게 생산체제 개선해야	2018.06.20.
제89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에 정부 적극 나서야 : 동티모르 호주 조정 사건의 시사점	2018.06.27.
제90호	빅데이터 분석은 해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2018.07.04.
제91호	남북한 해양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협력 추진 필요	2018.07.11.
제92호	북한 경제 특구를 활용한 남북 해양수산물 협력 필요	2018.07.18.
제93호	해양벤처 육성을 위해서는 해양 분야 전용펀드 조성해야	2018.07.25.
제94호	김 재고 증가, 과잉생산 대책 마련 시급	2018.08.01.
제95호	해양바이오 기술사업화 정책지원 강화해야	2018.08.14.
제96호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지원제도 강화해야	2018.08.29.
제97호	IMO 전략계획을 수용한 정책 수립과 이행성과지표를 구축해야	2018.09.05.
제98호	항만근로자 안전관리 거버넌스 재구축 필요	2018.09.21.
제99호	중국 진출 화주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기업 경쟁력 제고 및 정부 지원책 모색 필요	2018.10.02.
제100호	'스마트 어촌(Smart Fishing Community)' 도입으로 어촌 인구소멸에 대응해야	2018.10.17.
제101호	군 경계철책 철거 전 사전 대비 필요	2018.10.31.
제102호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업계,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보다 적극 대비해야	2018.11.07.

구분	제목	발간일
제103호	해양강국 위해 한국해양법연구소 설립해야	2018.12.12.
제104호	우리나라 극지진출 40년, 미래 30년을 위한 극지 비전 수립 - '2018 북극협력주간' 성공적 개최와 세계최초 '2050년 극지비전' 선포	2018.12.19.
제105호	블록체인인의 확산과 해운물류분야의 대응	2019.01.02.
제106호	해양수산물과 국민경제 - '2019 해양수산물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2019.01.18.
제107호	2020년 황산화물 규제 시행 대비 해운부문 체계적 대응 필요	2019.01.30.
제108호	"국민हित감 광어", 소비 다변화 등 생존전략 마련해야	2019.02.13.
제109호	한·일관계 개선 위해 일본의 자세 변화 필요	2019.03.08.
제110호	수산업관측사업 성과와 사회적 후생 증대 효과	2019.03.13.
제111호	특별법 이행을 위한 항만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 정비 시급	2019.03.23.
제112호	2019년 중국 '양회', 해양수산물 관련 이슈 봇물, 항만비용 인하와 행정간소화 조치 에 주목 필요	2019.03.27.
제113호	'국민 80%, 해양이 국가발전에 기여' -KMI 2019 해양수산물 국민인식조사-	2019.04.17.
제114호	선박연료유 공급선박 벙커링 효율성 제고해야	2019.04.25.
제115호	4.27 판문점선언 1년, 해양수산물 남북협력 점검과 과제	2019.04.30.
제116호	주요국 해양정책 동향과 시사점 - 해양기반 성장전략 다시 만든다. -	2019.05.08.
제117호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 국산 대체로 생산어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듯	2019.05.09.
제118호	해양수산물 혁신사례 공유로 지역혁신성장 촉진	2019.05.15.
제119호	해양관련 국제기구, 글로벌 해양이슈 협력강화 논의 - 2019 글로벌 오션레짐 컨퍼런스 -	2019.05.24.
제120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북극이사회와 우리나라 북극협력 방향	2019.05.29.
제121호	마·중 무역전쟁이 해운·항만에 미치는 영향	2019.06.13.
제122호	사평문화 정착을 통한 해양테저 활성화	2019.06.13.
제123호	어업작업 안전재해 감소 대책 시급 - 관련 제도 및 조직 정비 필요-	2019.06.18.
제124호	유조선 피격이 해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2019.06.28.
제125호	친환경 선박법 이행을 위한 구체적 후속 조치 필요	2019.07.03.
제126호	북한 노동신문 키워드 분석으로 본 해양수산물 분야 시사점	2019.07.16.
제127호	대서양 연어 위해우려중 지정 유지에 따른 양식업계 대응 방향	2019.07.17.
제128호	섬 가치 제고, 접근성 개선과 고유자원 관리가 관건 - KMI 국민 섬 인식조사 결과 -	2019.07.17.
제129호	해양공간기본계획 7월 말 시행 - 지역사회 인식 증진과 역량 강화에 투자해야 -	2019.08.01.
제130호	항만도시 고용창출을 위한 항만배후지역 풀필먼트센터 구축 시급	2019.08.02.
제131호	현대상선의 얼라이언스 가입 의미와 향후과제	2019.08.02.
제132호	일본의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전략과 시사점	2019.08.05.
제133호	해양수산업 총산출액, 전 산업 9위 - 재도약을 위한 성장 전략 필요 -	2019.08.09.
제134호	한국 수산물 수출기업 성장 모멘텀 발굴 - 해외 글로벌 수산기업 사례로 본 -	2019.08.16.
제135호	한일 간 무역전쟁, 공급사슬 위험관리에 성패 달려 -해외 공급자 다변화 및 국내 대중소기업간 공급사슬 생태계 구축 등 대책 필요-	2019.08.16.
제136호	2018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전년 대비 소폭 감소	2019.08.20.
제137호	국제해사기구(IMO), 2030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新추진연료(화석 연료-OUT) 개발 및 사용을 의미	2019.08.22.
제138호	중국 항만시설사용료 추가 인하가 우리 항만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9.08.23.
제139호	2분기 해양수산물 업황 여전히 어려우나 3분기 점진적 개선 기대 - 해양수산업 경기실사지수(BSI) 발표 -	2019.08.28.
제140호	항만(부산항 등)-대륙철도 해륙복합운송으로 유라시아 지역 물동량 유치해야	2019.08.29.



구분	제목	발간일
제141호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양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 현재 11.9% 영향, 지속되면 23.0%로 증가 -	2019.08.29.
제142호	2019 제2차 한-베트남 공동 세미나 - '한-베트남 교류 협력 및 투자 활성화 방안' 지상 중계 -	2019.09.10.
제143호	K-IFRS 제1116호 '리스' 적용과 대응방향	2019.10.25.
제144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 방향	2019.10.25.
제145호	해양포유류 자원 조사와 보호프로그램 마련 시급 - 2021년 미국의 관련 수산물 수입규제 유예기간 종료 -	2019.10.28.
제146호	미래 수산물 구매세대, 청소년의 수산물 소비행태 및 인식 조사결과	2019.10.28.
제147호	육상기인 해양 플라스틱 예방 정책을 강화해야	2019.10.30.
제148호	러시아 항만인프라 투자에 대한 실효성 제고 전략	2019.10.30.
제149호	Tax Benefit을 통한 민간부문의 선박금융 활성화 필요	2019.11.01.
제150호	2019년 미국의 국제 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19.11.01.
제151호	'유엔 공해생물다양성협약' 제정(制定) 협상 대응전략 마련해야 - 내년 4월 협약초안 유엔 총회 제출 -	2019.11.04.
제152호	해운·항만 정책 의사결정 지원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필요	2019.11.06.
제153호	컨테이너 선박다형화와 항만의 대응	2019.11.07.
제154호	해상에 설정된 보호지역, 지역주도형·협력적 접근방식으로 개편해야	2019.11.08.
제155호	해수욕장 이용행태 변화로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 필요	2019.11.12.
제156호	국제여객항 운영체계 개선과 여객 편의성 제고 필요	2019.11.13.

URL: <https://www.kmi.re.kr/>